

# 제2장 국가 중기재정운용 여건

## 1. 최근 경제상황

□ (세계경제)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가운데 완만한 성장세 전망

- 전 세계적인 통화 긴축, 지정학적 영향 등으로 '24년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
  - OECD는 '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.1%로 예상하였으며, '25년 3.2%로 완만한 개선을 전망(OECD Economic Outlook, '24.5.)
- 물가는 통화 긴축에 따른 수요 제약으로 둔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, 중동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상방 압력도 존재
  - ※ OECD 평균 물가상승률 전망(%) : ('23) 7.1 → ('24) 4.8 → ('25) 3.5

□ (국내경제) 수출이 견조한 가운데 내수도 회복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

- 국내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, 소비·건설 등 내수 회복모멘텀에 힘입어 성장세 개선
  - '24년 경제성장률은 2.5%로 '23년(1.4%) 대비 상당폭(1.1%p) 상승할 것으로 전망(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, '24.5.)
- 물가상승률은 근원물가를 중심으로 완만한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, 내수 회복과 높은 환율 수준에 따른 상방 압력도 존재
  - ※ 물가상승률 전망(%, YoY) : '23년 3.6% → '24년 2.6% → '25년 2.1%

< 한국경제 주요 지표 전망(%, '24.5.) >

	'23년	'24년	'25년
경제성장률	1.4	2.5	2.1
민간소비	1.8	1.8	2.3
재화수출	3.1	5.1	3.0
물가상승률	3.6	2.6	2.1

## 2. 국가 재정 운용 방향<sup>1)</sup>

### 1. '25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

- ◇ 혁신생태계 조성  
과 미래 대비 체질 개선으로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, 약자보호 및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 역할을 강화
- ◇ 건전재정기조 확립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

#### < 건전재정기조의 의미 >

- 무조건적인 지출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,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**불요불급한 지출은 철저히 감축**하되,
-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, **우리경제의 체질 개선과 사회구조를 혁신하는 투자를 과감하게 추진**하여, **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**하고 **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**하는 것을 의미

#### ① 혁신생태계 조성, 경제·사회 체질 개선으로 역동 경제 뒷받침

- R&D 시스템 개혁과 투자 확대, 첨단산업 인프라 조성·인재 양성 및 중소기업·유망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
- 저출산·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, 청년 일자리·주거·자산형성 지원으로 청년의 미래 도약을 뒷받침
- 지역의 일자리·인재양성·생활환경 개선으로 지방시대를 구현하고, 무탄소 에너지 전환 지원 등 기후 위기 대응력 강화

#### ② 취약계층 보호, 국가안보·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

- 기초생활보장 제도 강화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, 취약계층·소상공인의 자립역량 강화로 사회 이동성 제고
- 첨단강군 육성으로 국가 안보를 확립하고, 공급망 안정을 통한 경제안보 강화, 재난대비 인프라 및 필수·지역의료 지원 확대

1)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(기획재정부, '24.3월)

---

### ③ 현장·과제·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과 강력한 재정지출 효율화 지속

---

- 정책 수혜자 의견 반영, 국민·기업의 부담 완화, 정책과제 중심의 부처 간 협업 확대 등 현장·과제·성과 중심으로 재정 운용
- 건전재정기조 확립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, 효율적 재정관리 등 재정혁신 노력 지속

---

## 2. 4대 투자중점

---

- (4대 투자중점) ①사회적 약자·취약계층 보호, ②민간 경제활력 제고, ③경제 체질·구조 혁신, ④국가의 기본기능 강화
- 

### ① 끊임없이 혁신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

---

- (첨단산업) High5+ 첨단산업\*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, 특성화대학·부트캠프(단기 집중 교육 과정) 등 첨단인력 양성 강화  
\* 반도체(디스플레이 포함), 이차전지, 바이오, 미래모빌리티, 수소 등
- (R&D개혁) 현장 체감형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혁신·도전형 연구, 미래 전략분야, 신진연구자 지원 등 R&D 투자 확대
- (중기·벤처) 중소기업 해외진출·금융·마케팅 지원으로 성장을 견인하고, 민간 역량 연계 벤처투자 및 해외·지역 창업생태계 고도화
- (서비스산업) K-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, 첨단기술을 활용한 바이오헬스 육성 및 지역별 관광콘텐츠 발굴 추진

### ② 우리사회의 소외된 약자를 두텁게 지원

---

- (보장성 강화) 우리사회의 가장 어려운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속 강화
- (사각지대 해소) 노인·장애인·한부모 등 정책 수혜자별로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촘촘히 지원
- (자립기반 확대)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 노동시장 진입 촉진 지원
  - 장애인,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확대

- (소상공인) 전통시장·소상공인의 매출기반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화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

### ③ 미래대비 경제·사회 체질개선

---

- (인구변화 대응) 일·가정 양립 및 돌봄·자녀교육을 지원하고 고령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
- (청년 삶 개선) '직업계고-대학생-취업준비생' 단계별 일자리 기회 제공으로 취업역량 강화
  - 주거·자산형성·국가장학금 지원으로 미래 도약 뒷받침
- (지방시대) 광역교통·문화 등 지역 생활환경 개선, 대학·산업·지역의 동반 성장 및 민간투자 유도로 지역거점 조성
- (기후위기 대응) 원전·수소 산업생태계를 확충하여 무탄소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, 녹색기업의 해외진출·금융지원 강화

### ④ 튼튼한 안보체계 확립과 국민안심 사회 구현

---

- (국방) 유·무인 전투체계 가속화, 과학화 훈련 등 첨단기술 기반 전력 을 증강하고, 한국형 3축 체계를 고도화
- (경제안보) 공공비축, 수입선 다변화,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으로 필수 에너지·자원의 공급망 안정 지원
- (국민안전) 풍수해·지진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·장비 투자를 지속하고, ICT 기반 예보·예측체계를 강화
- (필수·지역의료) 응급·중증·소아 등 필수의료분야 인력양성과 운영개선 지원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
  -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 거점병원 중심의 진료 협력 지원

---

### 3. 재정운용 혁신

---

#### ① 현장·과제·성과 중심의 재정운용

---

- (현장수요 반영) 민생토론회, 사업현장 등에서 정책수혜자가 제기하는 요구사항과 문제해결 방안을 재정사업에 반영
- (부담금정비·규제혁신) 부담금 원점 재검토를 통해 국민부담을 유발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부담금 개편
  - \* 부담금 정비에 따라 수입이 감소하는 기금은 지출 구조조정 등 재원 조달방안 마련
  - 각 부처는 규제혁신과 관련한 후속조치, 이해관계자와의 현장소통, 수요자 맞춤형 규제혁신 홍보를 위한 예산 편성
- (부처간 협업 확대) 주요 정책과제\*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예산 요구단계부터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협업사업 적극 발굴
  - \* 인구구조 변화 대응, 청년정책, 지역균형발전, R&D 구조개혁 등
- (맞춤형 홍보) 국민들이 필요한 정책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수혜자별 맞춤형 홍보를 강화

---

#### ②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지속

---

- (사업타당성 전면 재점검)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·효과성을 재검토하여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삭감·폐지
  - 재정사업평가(보조사업 연장평가, 재정사업 자율평가, 일자리사업 평가 등) 결과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한 구조조정 추진
- (경직성 지출 누수 관리)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출사업은 지원기준 및 지원수준을 합리적으로 개편
  - 사회보험 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 강화 등 지출 효율화 지속

- (재량지출 10% 이상 감축)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모든 재량 지출에 대해 10% 이상 구조조정 추진
  - 절감재원은 투자 중점분야의 신규·계속사업 소요로 전환하고 부처의 구조조정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·패널티 부여
- (유사·중복사업 정비)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은 핵심사업 중심으로 개편
  - 신규사업 요구시 타 부처 사업과의 유사중복에 대해 관련 부처 간 상호 검증

### ③ 효율적 재정관리 추진

- (조세지출-재정지출 연계) 신규예산 요구 시, 조세지출과의 유사·중복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강화
  - 기존 사업도 조세-재정지출 간 유사·중복성 점검 후 정비
- (전달체계 개선) 사업내용이 유사함에도 부처·기관별로 분절되어 운영 중인 사업은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·통합
  - \* 서비스 제공 종사자 중 노인 비중이 높은 정부지원 돌봄사업은 노인일자리(사회서비스형) 사업과 연계하여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대
- (재원간 칸막이 해소) 여유재원이 있는 기금·회계는 효율적 사업운용을 위해 다른 기금·회계로 전출·예탁 추진
  -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 부문 간 투자 불균형 개선, 중앙·지방간 역할분담에 따른 보조율 합리화
- (투자재원 다각화) 민간 수행이 효과적인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우선 검토 하고, 개발이익·공공기관·지자체 등 다양한 재원 활용

### 3. 중기 지방재정 운용여건

#### 1. 수입 측면

□ (자체수입) 부동산 시장 둔화 및 국세수입 저조 등에 따라 자체수입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

○ (지방세) 부동산 시장 둔화에 따른 취득세 정체 및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소득세 저조 등 전반적 지방세수 여건이 제한적

- 안정적인 예산 운용 및 세입-세출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정밀한 세입예산 분석을 바탕으로 객관적·합리적인 예산편성 필요

○ (세외수입)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,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·진단 내실화 등으로 점진적 확대 기대

□ (이전수입) 중기적으로는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되나, 단기적으로는 국세 수입 저조에 따른 이전수입 감소 우려 존재

○ 최근('24년 상반기)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국세수입이 저조함에 따라, 단기적으로는 이전재원 감소 우려 존재

○ 다만, 최근 내수 회복·수출 호조 등에 따라 향후 국세수입 실적 개선이 예상되며, 중·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따라 완만한 증가 전망

- 교부세·국고보조금 등 자치단체 이전수입도 완만한 증가세 예상

< 2024~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국세수입 전망('24.8월) >

※ (국세수입 전망액, 조원) '24년 367.3 → '25년 382.4 → '26년 400.4 → '27년 421.4 → '28년 444.3

\*연평균 4.9% 증가 전망('24년 기업실적 호조와 '25년 대내외 여건 개선 등에 따라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의 세수 증가)



## 2. 지출 측면

□ 지출 감소·증가요인 상존,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 필요

□ 중장기적으로 저출산·고령화\*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, 지방소멸 가속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지출소요 증가 전망

\* 노령인구(65세이상, 만명) : ('15)654.1 → ('17)706.6 → ('19)768.9 → ('21)857.1 → ('23)949.9

○ (인구구조 변화 대응)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 및 고령화와 노인 빈곤 등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 예상

○ (지역경제 회복)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활력 저하, 고물가·고금리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 필요

○ (성장동력 확보) 첨단 지역전략산업 육성, 기업 지방이전 지원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

□ 한편,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, 지방-교육재정 등 부문간 자원배분 합리화 필요성도 증가

○ (지출 효율화) 약자복지·성장동력 확보에 적극 투자 필요, 불요불급·관행적 사업, 유사·중복 및 성과미흡 사업 등은 정비 필요

○ (재원 합리화)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\*로 교육지출 수요는 점진적 감소,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지출은 지속적 확대 예상

\* 학령인구(6~17세, 만명) : ('15)616.5 → ('17)581.9 → ('19)553.7 → ('21)542.0 → ('23)531.2

⇒ 지출 효율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낭비요인을 제거하여,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, 과감하게 투자 필요

## 4. 중기지방재정 운용방향

---

### ①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건전재정기조 확립

---

- (지출 재구조화) 모든 사업의 타당성·효과성을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정비·폐지, 절감된 재원을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 재투자
  - 유사·중복, 성과미흡, 집행부진 사업 등은 삭감·폐지, 인구구조 변화 대응, 미래 성장동력 확보, 약자복지 및 민생안정 등에 재투자
- (세입기반 확충) 지방세 비과세·감면 정비, 신세원 발굴, 악의적·고액 체납대응 인프라 강화 등 세입기반 확충 노력 지속
- (공유재산 정비) 공유재산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 실시, 유휴·저활용 재산의 활용·매각 등을 적극 추진하여 세입기반 확대
- (안정적 채무관리) 만기도래 채권 적극 상환 및 신규 발행 최소화, 우발 채무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지방채무 관리

---

### ② 합리적 재정혁신과 책임성 강화

---

- (재원구조 합리화)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부문간 투자 불균형 개선을 위한 지방·교육재정 간 재원구조 합리화\* 노력 지속
  - \* 시·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제 개선 등
- (기금·특별회계 정비) 기금·특별회계 성과평가 등을 통해 설치목적 달성, 성과 미흡 등 불필요한 기금·특별회계는 폐지·정비 추진
  - 타 기금·회계와의 중복, 목적사업 수행 곤란 등에 따라 성과가 미흡하거나, 일반회계 재원에만 의존하는 기금·특별회계는 적극 폐지
- (성과관리 강화) 주요재정사업평가 내실화 및 평가결과 환류 강화를 통한 성과미흡 사업 예산 삭감 등 지출구조조정 실시

---

### ③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

---

- (초저출산 대응) 돌봄·교육 등 출산·양육 지원서비스 강화,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 개선 등 결혼·출산·육아 전반에 걸친 지원 확대
- (고령화 대비) 지출 증가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, 고령자 계속고용·노인일자리 등 자립기반 및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
- (전략산업 육성) 지역 부흥을 위한 미래형 첨단산업 육성, 디지털 전환 등 농수산업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산업화 추진
- (기업이전 지원)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재정·세제·금융 지원 및 의료·문화·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투자 촉진
- (대학·인재육성) 지방의 대학지원 역할 확대\*에 따른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체계 구축, 미래 산업수요 대응을 위한 맞춤형 인재 양성
  - \*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(RISE), 글로컬 대학 육성 등
- 특히, 지방-산업-대학 연계·협력을 통한 맞춤형 청년인력 양성 추진

---

### ④ 두터운 약자복지와 민생안정 지원

---

- (맞춤형 약자복지)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, 기초생보 지원 강화 및 생활·돌봄·주거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선별지원 확대
  - 노인·장애인·한부모·다문화 등 정책 수혜자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 추진
- (자립기반 조성)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·고용지원 확대 등 노동시장 진입 지원으로 사회이동성 제고
- (일자리 창출) 직접일자리 사업은 축소하되, 교육훈련·취업알선, 고용유지 등 민간 일자리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
- (소상공인 지원) 고물가·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·소상공인 부담 완화, 매출기반 확대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

